

달라진 게 없는 교육현장... 여전히 교권 침해 시달린다

'사이초 교사 사망' 그 후 1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달 휴직계를 제출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이 수업 중 큰 소리를 내는 등 정서 위기 행동을 보여 분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모에게 전달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다.
 A씨는 "부모에게 학생의 상황을 전달하면 '우리 아이가 그럴리 없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있다'며 반발하고, 다른 학생의 부모들은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내버려두냐'고 항의한다"며 "혼자서 이 모든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 학생들이 다루는 바람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까지 열려 '혐의없음' 결정이 났지만, 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있다", "선생 자격이 없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B씨는 "교장,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교단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전남 교권침해 매년 증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 실정 몰라
 교권보호위 열려 징계 조치해도 학부모 불복 행정심판 청구에 '고충'
 광주 교사 500명 설문조사... 68% "교육 활동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이초 2년 차 교사가 숨진지 1년(2023년 7월 18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교사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한다.
 17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는 2019년 180건, 2020년 95건, 2021년 164건, 2022년 209건, 2023년 367건으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았던 지난 2020년 절반 가량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교사들은 "사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

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마련되고 교육부와 광주·전남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천명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교권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달 27일 복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학생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중학교의 책임자로 현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교장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대답만 내뱉은 뿐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뒤에야 나타났고, 2시간여 동안 이 학교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사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1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앞 이음광장에 마련한 추모공간에서 광주 지역 교사들이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중학교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의 연서명을 교육청에 제출했고 현재 광주시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교사들이 겪는 교권침해 실태는 심각하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최근 광주지역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4%가 '교육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징계 조치가 이뤄져도 학부모가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권보호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초등교사 박모씨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다보면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학부모가 협조적이지만 일부 악성 민원이 교사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해하게 만든다. 교사가 소송에 얽매게 되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도입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교사들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사관들이 짧은 기간 연수만 받고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돼도 관리자인 학교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며 "교육감이 당사자로 나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새벽기도 후 귀가 노부부 무차별 폭행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0년 구형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17일 광주지법 301호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6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B(여·71)씨와 C(72)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노부부를 폭행하기 전 위층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 D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

다.
 폭대기 층부터 내려가던 A씨는 14층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D씨를 붙잡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D씨는 이를 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3층으로 향한 A씨는 복도에서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B씨 부부와 마주치자 이들이 쫓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B씨는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약을 5일전부터 복용하지 않아 일부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8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지역주택사업 '이중분양' 업자·조합장 실행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 받게 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행이 선고됐다.
 이중분양 사실을 묵인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조합장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 대표 A(60)씨와 B(39)씨에 대해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업체 분양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C(50)씨는 업무상 배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과 함께 30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조합원 모집 업체 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박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기로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총 125명의 피해자에게

8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인 C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주택 매매가를 7000만원 증액하고, 대행사의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 또 대행사 관계자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 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분양사기를 벌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행위 업체에 '보도 협박'... 인터넷신문 간부 2심도 징역형

업체의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한 인터넷 언론매체 간부 A(59)씨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사 무미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같은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B(52)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공갈 미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언론사 소속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에 대해서도 1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B씨는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보도하지 않는 대신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

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불법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C업체측을 압박해 지분을 넘겨주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업체는 A씨의 요구가 부담돼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 경찰의 정도, B씨가 갈취한 금품의 액수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